2006 년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 보고서

2007 년 4 월 30 일

■ 한국(전문)

제 2 장. 국가별 보고서: 한국

대한민국은 우수한 치안과 첩보 능력을 입증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 경찰들에게 대테러 훈련을 제공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주로 집중했던 한국 정부는 범위를 넓혀 한반도 밖의 잠재적 테러행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2006 년 2 월 한국 최초의 국제대테러협력국장(Director for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operation)을 임명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목표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파병·주둔시키고 있으며 2004 년 이래로 2 억 6 천만 달러를 원조했다. 한국 정부는 테러자금 조달 및 돈세탁 근절 활동에 있어서도 귀중한 국제적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12 월, 한국은 화물안전구상(Secure Freight Initiative)에 참여하는데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모든 미국행 화물의 방사능을 검색한다. 항공안전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의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항공안전 감시프로그램)에 참가해 ICAO 활동을 위해 50 만 달러를 기부했다. 작년 11 월, 한국은 다른 APEC 회원국들과 함께 항공안전, 생화학테러 및 식품 방어(food defense), 대량살상무기 확산세력의 상업 및 금융 분야 이용 방지에 관한 미국의 안보 구상을 지지했다. 한국은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각종 양자간 상호 대테러 조치를 취했으며, 작년 11 월 한국과 필리핀은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국가 컴퓨터 비상대응팀 개발에 관한 합동 연구에 착수했다. 12 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말라카(Malaka) 해협과 싱가폴 해협에서의 테러 및 안전을 포함해 국제 범죄 퇴치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호주, 싱가폴, 인도, 베트남, 러시아, 중국과 양자간 대테러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 출입국 사무소와 경찰은 수상한 입국자들을 추적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잠재적 테러 행위를 저지하는데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작년 9 월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MANPADS(Man Portable Air Defense System, 휴대용 대공 시스템) 취약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3 단계 경보체계, 지역 순찰 강화, 대중 교육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지역 훈련 및 능력증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중남미,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파견된 요원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형사사법, 대테러, 법의학, 해적 대응 및 테러 관리, 돈세탁 방지, 마약류 단속 훈련을 주관했다.

■ 북한(전문)

제 3 장. 테러 지원국: 북한

북한은 1987 년 KAL 기 폭파사건 이후 어떠한 테러 행위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70 년 항공기 납치에 가담한 일본의 적군파 요원들에게 은신처를 계속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국가기관이 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12 명의 행방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2002 년 이후, 납치된 12 명 중에 5 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2007 년 2 월 13 일, 초기 조치 합의(Initial Actions Agreement)에서 미국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